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05 | 2025.11.03 (2025.10.27~2025.11.0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7인)**」,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의원 등 2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정보위>, **<운영위>**, **<성평등가족위>**의 **2025년도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법사위>, <국방위>, <농해수위>, <예결위>**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OECD「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문신사법(보건복지부) ····· 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환경에너지부) ····· 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10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2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 12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소방청)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14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 1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 1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 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 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16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17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 18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 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 20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31인) ····· 20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 2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 22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 22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 2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23
-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 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 24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 25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 25
-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7인) ····· 25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의원 등 20인) ····· 2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15. - 2025. 10. 2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ECD「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발표 - 기술융합·정책 시너지 강조 - 한국, 높은 혁신역량의 사회적 확산 필요	2025-10-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월 28일(파리 현지 기준) 제127차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총회에서「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고 밝힘

※ 과학기술혁신 전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과학기술혁신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는 대표 정책보고서(격년 발간)

※ CSTP(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 1972년 설립 이후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글로벌 의제 생산 및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위원회

[국제 과학기술정책 동향]

최근 OECD 회원국들은 과학기술혁신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 ▲ 미국, EU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증가세 주춤, ▲ 정부 R&D 예산 내 에너지 분야 비중은 2015년 대비 2023년 약 2.3배 확대, ▲ 연구안보 관련 제도 도입 국가는 40개국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OECD는 최근의 흐름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분열이 확대되면서 정책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각국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정책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이번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특히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등 상충되는 정책 목표 간에도 시너지를 창출하고, 정책 간 연계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OECD는 과학적 개방성과 경제안보의 균형을 위해 ▲진흥(Promotion), ▲보호(Protection), ▲투영(Projection)의 3대 정책 프레임과 ▲비례성(Proportionality), ▲파트너십(Partnership), ▲정밀성(Precision)의 3대 원칙을 제시했음. 이는 국가 간 기술협력과 연구안보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위험 수준에 따른 정밀한 대응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아울러, 보고서는 합성생물학, 신경기술, 양자기술, 우주기반 지구관측 등 첨단기술의 융합이 혁신과정과 정책 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융합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한국 관련 내용 및 평가]

OECD는 한국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기업의 R&D 지원에서는 직접 지원과 세제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음. 반면, 여성 R&D 인력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음. 이 밖에도 ▲CCU 실증 지원센터, ▲연구보안체계 내실화 방안 등 한국의 주요정책 사례들이 대표 사례로 소개되었음. OECD는 이를 통해 한국의 높은 혁신 역량을 인정하면서도, 과학기술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음

[시사점 및 대응방향]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단순한 연구개발 중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이는 과기정통부가 OECD와 협력해 온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의 방향성과도 일치함. MOIP는 과학기술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해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정책으로, OECD가 제시한 '정책 간 시너지와 사회적 확산' 기조를 구체화한 모델임

※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ies) 한국보고서('25.2월) : 한국의 대표 정책사례를 OECD MOIP 분석틀에 따라 소개하고, 임무 중심 강화방향 제시

보고서가 제시한 기술융합과 개방·보호 균형의 원칙은 한국이 OECD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신흥기술 및 연구안보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고 있음. 이는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면서도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과학기술 외교 전략과 맞닿아 있음

※ 한-OECD 신흥기술 공동연구('24~'26) : 양자과학기술, 합성생물학 등 신흥기술 분야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한-OECD 연구안보 프로젝트('25~'26) : 각국 정책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연구안보 정책방향 제시

또한 OECD가 강조한 '과학기술혁신의 확산(STI diffusion)' 개념은 한국 정부의 지역 중심 과학기술정책 기조와도 연관됨. OECD는 혁신이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지역으로 확산될 때, 혁신의 질과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음. 이는 한국의 혁신정책이 기존의 산·학·연 중심 구조에서 지역·중소기업·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보건복지부	문신사법	2027-10-29 시행 예정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문신 등을 시술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니라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04-29 시행 예정

현행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1-01 시행 예정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화주 등은 운수사업자 등에게 운송계약 등 체결 전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액수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8 시행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의 경우에도 재화를 판매하는 자 등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준수해야 하는 채무보증의 요건을 완화하며,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10-28 시행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종전의 '계좌 기반'에서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결합하여 처리하는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여 시장감시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2025.10.31. ~2025.11.21.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이 제정(법률 제20672호, 2025. 1. 21. 공포, 2026.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안 제2조 및 제3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다음해의 시행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 실태조사의 구분 등 (안 제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로 구분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리도록 함

③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및 절차 등 (안 제6조 및 제7조)

-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선정하는 기준과 자체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

④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안 제16조)

-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기술성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조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 및 생산능력 등을 갖추도록 함
-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차하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도록 함

⑤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안 27조)**
-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을 기술성 평가기준과 사용성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함

⑥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절차 등 (안 제31조 및 제3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전화: 044-202-6155, 팩스: 044-202-603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29. ~2025.12.8.

문화영향평가의 환류 규정, 평가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한 「문화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36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행기관·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기준·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전화: 044-203-2564, 팩스: 044-203-346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0.27. ~2025.12.8.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도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해석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하며, 일부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10.28. ~2025.12.8.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64, 팩스: 044-200-5749)

소방청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10.28. ~2025.12.8.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한 소방용품의 부속품이 타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았거나 해외인증에 합격한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에 따른 수수료 할인율을 20프로에서 40프로로 확대하는 한편 제품검사 신청수량에 따른 수수료 할인구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과 소방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문의처 : 소방청 소방산업과 (전화: 044-205-75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10-29 발의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조)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5-10-30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규정은 침해사고 발생 유형에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등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성코드 감염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고 있음. 현재 금융회사등은 1만 명 이상 고객 신용정보 유출, 전산장애 등 가시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악성코드 감염 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음. 해외의 경우 미국은 CISA를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를 조기 발견하고 시스템 침투 등 발생 가능한 중대한 위험에 대해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EU는 GDPR 배포를 통해 악성코드 대응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을 침해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 악성코드 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의4 및 제49조)**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10-27 발의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4인)	2025-10-27 발의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 및 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녀가 부모와 동거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한 경우 6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상속세 공제 수준은 25년 이상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1세대 1주택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인 배우자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최소한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도 거주하던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수준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그간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최대 공제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2제1항 개정)**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	2025-10-27 발의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2025-10-27 발의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2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10-27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부여해 왔지만, 제도의 중심이 오랫동안 설비투자에 치우쳐 실질적인 국내 생산·판매 역량을 직접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격화되고, 특히 일본이 2024년부터 전략분야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주요국이 '국내 생산' 자체를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흐름까지 더해지며 우리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도 잠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반도체처럼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복되는 산업에는 비교우위가 있지만, 다수의 전략산업에서는 생산효율성 제고와 국내공정 유지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제조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대규모 초기투자 단계의 현금흐름 애로를 덜기 위해 미공제액에 대해 충분한 기간(10년)의 이월공제를 인정하여 안정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산업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체계를 보완해 실제 국내 생산과 고용기반을 확충하는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일본·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연동형 인센티브 흐름과 보조를 맞춰 기업의 리쇼어링·온쇼어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10-27 발의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두배인 1%로 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교육세는 간접세로서 법적 납부 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독과점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납세의 전가가 다른 시장보다 크게 발생함. 특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는 1차적으로 가맹점이며, 일반 소비자도 신용카드사 결제 서비스의 간접적 소비자의 지위에 있음

한편,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부터는 최저 0.4%의 우대수수료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등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익 및 연회비 수익의 상당 부분은 마일리지와 제휴할인 등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반환되고 있음. 그러나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까지 교육세가 2배로 인상된다면 신용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과 소비자들에 혜택 축소와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임

더구나 신용카드사의 전체 수익 중에서 가맹점 수수료는 2023년 기준 23.2%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나머지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을 통해 교육재정 확보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

이에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5조)**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4인)	2025-10-28 발의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를 교육세로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초중고)는 2015년 756만명에서 2024년에는 613만명으로 10년 사이에 18퍼센트 가량 감소하여 신규교사 채용 감소 및 학교 통폐합·폐교 등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0.9조원(연평균 6.19조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수에 연동하여 산정되어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분야 내 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중·고 교육과정 외에 대학 이상의 교육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재정운영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운영의 비효율화는 금융·보험업의 원가요소인 교육세를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후생과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1조원 이하' 구간은 0.3퍼센트, '1조원 초과' 구간은 0.5퍼센트로 조정**하여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 개선 및 연착륙 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1항)**

국방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2025-10-28 발의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5-10-28 발의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2025-10-28 발의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36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3인)	2025-10-29 발의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2025-10-29 발의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1인)	2025-10-28 발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일상 생활 영역에 확산되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관련 지원이나 혜택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의 부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동아의원 등 31인)	2025-10-27 발의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2025-10-28 발의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2025-10-29 발의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1인)	2025-10-29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5인)	2025-10-30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5-10-30 발의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구축하는 법인을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를 정의하고, 이들에게 전기사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제2호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25-10-30 발의

이차전지 중심의 배터리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음

세계 각국도 배터리산업을 국가안보와 기술주권의 핵심으로 인식하여 배터리기술의 개발,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 특히, 배터리산업의 원료 확보부터 소재·부품·장비 개발, 배터리 완제품의 생산·활용 및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재제조 등 순환경제 구축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	2025-10-29 발의

현행법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두어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돌봄 부담이 직장 포기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중으로 부담을 겪는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안 제19조의7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2025-10-27 발의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재개발·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음

이에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2025-10-29 발의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면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외발형 전동휠, 양발형 전동휠인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으로 등장하고 있음. 기존에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용의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빠르게 대중화되어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경찰청,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흩어져 있는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1인)	2025-10-30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54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등 27인)	2025-10-30 발의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국가비전('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2020)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기준)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운송 수단별 입법화 현황을 보면, 자동차나 선박의 경우 저탄소 운송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육성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철도차량의 경우 약 30% 정도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하고, 친환경 철도 관련 기술개발 및 공공 인프라 등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여건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 철도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소 철도차량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보위원회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김상훈의원 등 20인)	2025-10-27 발의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법률 17646호)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제 및 국가 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과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정보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지 않아 사이버안보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1/6(목) 14:00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예결소위	11/7(금) 10:00	-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11/5(수) 10:00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농해수위	전체회의	11/7(금) 10:00	- 2026년도 예산안 상정, 법안 의결
예결위	공청회	11/5(수) 14:00	-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
	전체회의	11/6(목) 10:00	- 종합정책질의
	전체회의	11/7(금) 10:00	- 종합정책질의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3(월) 14:00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원화 스테이블 코일 유통 및 과세 체계**	민병덕·이강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3(월) 14:00	**국회 AI 정책포럼 미·중 AI 패권 경쟁과 국내 AI-AX 도약 전략: 피지컬 AI 중심으로**	정동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4(화) 10:00	**AI 데이터 주권 & K-컬처 체인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선도 포럼**	박성준·김우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5(수) 13:30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	임종득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11/6(목) 10:00	**(근로기준법 적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장 실태 증언대회**	정혜경·김주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6(목) 14:00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	한준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7(금) 10:00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3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	남인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5(수)	**「Data&Law」 제37호(2025-12호) 발간**	국회도서관	
	11/5(수)	**「금주의 서평」 제752호(2025-43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04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0/28(화)	**「Data+」 제20호(2025-20호)**	국회도서관	
	10/2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3호(2025-20호)**		
	10/29(수)	**「금주의 서평」 제751호(2025-4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0/29(수)	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액 산정을 위한 택지비 반영시 선납할인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10/30(목)	금융	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10/31(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10. 15. - 2025. 10. 28.)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